

野,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처리… “지역경제 살리는 법안”

與 “부익부 빈익빈” 지역 차별 상품권 현금살포법 시즌2… 악법 중 악법

野 “1인당 총소득 1.4% 뒷걸음질 할인 인센티브로 가처분 소득 올려야”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 마칠 전망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개정안’ 법사위 회부 여부를 심사했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고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

며 “243개의 광역 지자체 중 191개 지자체가(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돈 많은 광역 지자체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 돈 없는 지자체들은 못 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리고 만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소도시나 낙후 지역보다는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심의 국비 편중 지원으로 지역 차별 화폐법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민주당 대표)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 개정안’이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신문을 보니까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4%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며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올라간 가처분 소득을 지역 골목 경제에 투자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 의결 처리 이후 “현금살포법 시즌2”

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 법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 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진정 민생을 위하고 소비 진작을 원한다면 도움이 실질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몇 배는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세부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마음 같아선 추석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국회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현재 상임위의 수위를 보면 추석 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추경호 “종부세·상속세 완화하고 금투세 폐지 추진”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산층, 과도·징벌 세금 완화 강조 금투세 폐지 결정, 빠른 수록 좋아 野 ‘반도체특별법’ 발의… “환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드리겠다”며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한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

다”며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이러어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

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른수록 좋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반도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왔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가자”라며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대통령실, 응급의료현장에 1급 비서관 파견 방안 추진

현장 목소리 파악해 정책 반영 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 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추석대비 응급의료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대비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소속 비서관들이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머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기만 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4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가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투입해

서 의사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이탈 등에 따른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한동훈 “반도체 산업·연금개혁 추진 노력”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4일) 경북 구미 산단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구미를 보통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구미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될 수도 있도록 당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미루면 국가

적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하게 의의를 완료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그래야 구조 개혁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